

## 탄추위 회의일지

## ■ 7.20 전당대회

- (일시) 7.20.(土) 오후 3시
- (장소)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 (주요내용)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탄핵’ 과 ‘퇴진’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 고 밝히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당 역량 집중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 논의 진행

## ○ 발족식(1차 회의)

- (일시) 7.25.(木) 9시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실시
- (장소) 사전회의 : 국회 본관 219호, 공개회의 : 국회 본관 316호
- (참석자) 조국 당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의원, 이광철 총괄간사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특위 산하 3개 위원회 정비 방안 및 회의 체계 논의
  - 탄추위 제보센터 설치 관련 논의
  - 캠페인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 구상 논의

## ○ 2차 회의 및 제보센터 현판식

- (일시) 8.1.(木) 9시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10시 제보센터 현판식 실시
- (장소) 사전회의 : 국회 본관 219호, 공개회의 : 국회 본관 316호, 제보센터 현판식 : 국회 본관 219호
- (참석자) 조국 당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의원, 이광철 총괄간사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의원실별 핵심 탄핵 의제 배분 구성안 논의
  - 검찰개혁법안 관련 입법 진행 상황 보고
  -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실무회의 진행 등 대외협력 진행 상황 보고

○ 최고위원회-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연석회의(3차 회의)

- (일시) 8.14.(水) 8시 사전회의 / 9시 공개회의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신장식 산하위원회 위원장, 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 국회의원,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황명필·조운정 최고위원,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및 의원실 보좌진
- (주요내용)
  - 탄추위 운영 기조 및 방법론 제언 관련 이광철 총괄간사 발제 진행
  - 의원별 기 배분된 탄핵 의제에 대한 발제 진행 등 사전회의 운영 방식 논의 및 4·5차 회의 발제 의원 지정
  - 공개회의 발언 기조 관련 논의

○ 4차 회의

- (일시) 8.22.(木)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신장식 산하위원장, 정춘생 의원,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신장식 의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발제
  - 이광철 총괄간사 삼부토건 관련 사안 토론
  - 검찰개혁 법안 발의 관련 논의
  - 탄추위 사전회의 시 발제 및 공개발언 관련 논의

[참고] 조국혁신당 의원 워크숍(영광)

- (일시) 8.29.(木) 16시
- (주요내용)
  - 2016년과 2024년 탄핵을 둘러싼 상황 비교분석을 통한尹정권 탄핵에 대한 목적 설정
  - 현 탄핵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과 과제
  - 향후 탄추위 활동 경과 및 예정상황 점검

## ○ 5차 회의

- (일시) 9.4.(水) 8시 30분 사전회의 / 9시 1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김재원 산하위원장,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정춘생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차주 회의 발제 주제 및 발제자 선정

## ○ 6차 회의

- (일시) 9.11.(水) 9시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김재원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황운하 부위원장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국감 기간 사전회의 및 공개회의 시작시간 관련 논의
  - 9월 25일 영광 현장 탄추위 진행 관련 사안 논의
  - 탄추위 중간보고회 진행 관련 제안

## ○ 7차 회의(현장탄추위)

- (일시) 9.25.(水) 10시 사전회의 / 10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곡성 정당선거사무소, 공개회의 : 곡성 박웅두후보선거사무소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차규근·김준형 국회의원,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증축 불법 의혹 관련 차규근 의원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24일 의원총회에서 10월 2일 영광 현장 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10월 2일 탄추위 회의 관련 논의

○ 10월 1주차 ~ 3주차, 국정감사 및 10.16 재보궐로 인한 탄추위 미개최

○ 8차 회의

- (일시) 10.23.(水)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김재원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서상범 법률위원장, 이규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명태균 게이트’ 관련 주요 의혹 및 진행 상황 등 이규원 대변인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조국혁신당 탄추위 2개 산하 위원회 추가 논의
    - ‘명태균 게이트’ 위원회 (정춘생 위원장)
    -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서상범 위원장)

○ 9차 회의

- (일시) 10.30.(水)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김재원·신장식·정춘생·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명태균 게이트 추가 의혹 검토 관련 정춘생 위원장 대변인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탄핵소추안 준비 사항 관련 서상범 위원장 보고
  - 차주 회의 발제 주제 및 발제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관련 박은정 위원장 선정

## ○ 10차 회의

- (일시) 11.06.(수) 8시 30분 사전회의 / 9시 1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박은정 · 김재원 · 신장식 · 정춘생 · 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문제점 관련 박은정 위원장 발제 및 이광철 총괄간사 토론
  - 탄핵소추안 탄핵사유 관련 의원실 의제 배분 사항 논의
  - 20일 현장탄추위 개최 시간 및 장소 :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결정

## ○ 11차 회의

- (일시) 11.13.(수)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 · 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및 목차 보고 및 논의
  - 20일 기자회견 식순 등 준비사항 논의

## ○ 12차 회의(현장탄추위)

- (일시) 11.20.(수) 10시 공개 기자회견
- (제목) 조국혁신당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 · 정춘생 · 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차규근 · 이해민 · 강경숙 · 서왕진 국회의원, 이규원 대변인, 권위상 전국대의원대회회장, 한가선 청년위원장, 최창현 장애인위원장,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등

○ 13차 회의

- (일시) 24.11.27.(水)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정춘생·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향후 탄추위 운영 방안 보고 및 논의
  - 탄핵소추안 관련 공청회 및 연속 토론회 진행 결정

■ 12.3 비상계엄 선포

- 24.12.03.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14차 회의)

- (일시) 24.12.04(水) 8시 30분 사전회의 / 9시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국회 본관 로텐더 홀
- (참석자) 조국 위원장 및 국회의원 11인, 서상범 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 및 주요 당직자
- (주요내용)
  - 비상계엄 상황 대응을 위한 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 진행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내란죄 등) 논의 및 공개 진행

■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발의 및 표결 부결

- 24.12.04. 야6당 대표발의(191명)로 국회에 탄핵 소추안 제출
- 24.12.05.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 24.12.07. 재적 300인 중 재석 195인 표결으로 투표 불성립

## ○ 15차 회의 개요

- (일시) 24.12.08.(日) 오전 11시 사전회의/ 11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국회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정춘생·김재원·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추진본 및 개헌안 검토 및 공개 여부 논의
  -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추진본 공개 결정

## ○ 16차 회의 개요

- (일시) 24.12.11.(水)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국회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조국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정춘생·김재원·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탄추위 해소 및 새로운 대응 체계 관련 논의

## ■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 및 가결

- 24.12.12. 야6당 원내대표 대표발의(190명)로 국회에 탄핵소추안 제출
- 24.12.13. 14시 03분 본회의 보고
- 24.12.14. 재적 300인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

## ■ 가결 이후

- 24.12.14.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헌법재판소 접수
- 24.12.14.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 17차 회의 개요

- (일시) 24.12.18.(水) 8시 30분 사전회의/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국회 본관 223호, 공개회의 : 용산 대통령 관저 앞
- (참석자) 김선민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김재원·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기자회견 참석자) 김선민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신장식·김재원 산하위원장, 차규근·백선희·서왕진 국회의원, 조운정 최고위원
- (주요내용)
  - 탄핵 이후 당의 새로운 대응체계 모색 관련 논의
  - ‘내란수괴범 피의자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하라’ 기자회견 개최

○ 18차 회의 개요

- (일시) 24.12.27.(水) 8시 50분 사전회의 / 9시 30분 공개회의
- (장소) 사전회의 : 본관 223호, 공개회의 : 본관 224호 회의실
- (참석자) 김선민 위원장, 황운하 부위원장, 정춘생·김재원·서상범 산하위원장,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
- (주요내용)
  - 탄핵소추대리인단 진행 상황 보고
  - 탄추위 해소 및 새로운 대응체계 모색 관련 추가 논의

## 공개회의 발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오늘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주창했습니다. 거리에서 생목으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쳤고, 시민들은 뜨겁게 호응해주셨습니다.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함,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7월 20일 제1차 조국혁신당 전당원대회 때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총선 후 만나는 시민들마다 “3년은 너무 길다”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결의문, 황운하 원내대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두 번 심판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습니다. 첫 번째 ‘옐로우 카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친 윤석열계가 노골적으로 지지한 원희룡 후보 득표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동훈 후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두 번째 옐로우 카드입니다. 지난 총선 패자인 한동훈 후보보다 윤 대통령 측이 미는 원희룡 후보를 더 미워한 것입니다.

이제 ‘레드 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탄핵 또는 정권 퇴진을 위한 힘을 모으겠습니다.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습니다. 약속대로 그 첫 걸음을 오늘 땁니다.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조국 대표, 부  
위원장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탄추위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저 박은정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공소유지와 인권보호에 충실한 공소청으  
로 재건축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본법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일명 이선균법을 포함한 수사절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신장식 의원)**

저 신장식은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을 맡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진상조사특위가 이곳으  
로 합쳐집니다.

채해병 수사개입 의혹,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  
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수많은 위법과 국정농단의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  
니다. 국정농단진상규명위는 이들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무원들  
제보를 받고, 언론 취재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김재원 의원)**

마지막 하나는 시민사회와 연대 투쟁을 할 조직 ‘시민의 물결’입니다.

시민의 물결은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  
민에게 탄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등 대외협력도 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즉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김재원과 신장식 의원  
이 공동위원장으로 일합니다.

### **(조국 대표)**

대표인 제 책임하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독재정권의 거대한 빙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 오늘 시동을 걸었습니다. 쇠빙을 위한 저희의 행보에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해주길 촉구합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는 윤석열 탄핵호를 추진할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 □ 조국 위원장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 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윤석열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가 문을 엽니다. 국민 여러분, 050-7878-7070, 바로 이 번호를 저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jebo8007070@gmail.com 이메일 주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낫설지 않으실 겁니다. 채해병 사망의 진실을 덮기 위해 아주 수상한 질의응답이 오간 용산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과 같습니다.

국정농단 제보 전화는 이 번호가 ‘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이제 진실의 번호로 저장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 없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도 함께 일삼고 있습니다. ‘용산’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진심입니까?

“국민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한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님 진심입니까?

무도한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계속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꼭꼭 감추고 지운 7070 번호는 이제 새로 태어나 국정농단의 진실, 국민의

진심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만 가지 사유가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동훈 대표에게 똑똑히 알려주겠습니다.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열겠습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급이 다른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일까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책임질 줄도 모르는 대통령이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마구 권력만 휘둘러대니 무정부 상태에 가깝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와 유사합니다. 굳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피해가 덜할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결과, 윤석열 정권은 어느새 데드덕을 넘어 ‘좀비덕’이 됐습니다.

윤 정권은 MB 시절 방송장악 앞잡이였던 이진숙 씨를 끝내 방통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같은 날 반노동 극우 인사인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4, 50년 전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는 이유입니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았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발언은 노동가치 존중과는 대척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라 선전하는 극우 성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당마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교체를 정부에 건의했겠습니까?

윤 정부는 MB 시절 사망한 낙수효과를 되살려 민생을 파탄 내더니, 인사마저 평가가 끝난 구시대 인물들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 정도가 아니라, 막장 좀비 인사라 불릴만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반통일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대한제국보다 일제가 좋다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인사를 문화부 장관에, 한국학연구소에는 친일 학자를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권이니, 반노동 인사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앞잡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제정신인 국민이 가치전도된 윤석열 월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 월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문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월드를 끝장내야 정신 고문에서 국민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현재는 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국정농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극으로 판시했습니다만, 4가지 유형을 현재가 소추 사유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탄추위는 소추 사유를 밝혀내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서 국민이 벗어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용산발 수사외압 의혹이 다시 한번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 정권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벌인 세력들은 대통령실에 숨어 진실을 가리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관 채해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그 중심입니다.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대령은 백해룡 경정으로 바뀌었고, 임성근 구하기는 조병노 구하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격노는 ‘용산이 알고 있는 일’이 되어 외압으로 수사 내용이 바뀌는 판박이 국정농단이 또다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멀쩡하게 수사하던 수사팀은 “용산” 한 마디에 수사가 이첩되고 조병노 경무관



의 요구대로 최종브리핑에서는 세관의 마약사건 연루 의혹이 삭제됐습니다.

바로 어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남긴 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의 한 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장폐천! 윤석열 정권은 디올백으로도 하늘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분노 임계치가 넘어가고 있음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계속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외압과 실력행사로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용산과,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당당하게 일한 백해룡 경정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용산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현직 경찰관의 진술과 녹취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법적인 수사외압, 인사청탁 의혹에 맞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포함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신장식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 / 시민의물결 공동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

티몬·위메프에서 시작된 큐텐 계열사 미정산 사태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의 경보 시스템은 어디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은 2023년 초 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특히 주 1회에서 월 1회로 정산 방식을 변경한 5월 이후 정산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위험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당국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2022년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금융감독원, 2023년 7월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책임이 없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큐텐은 당겨쓰기,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은 부재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판매한 업체의 피해는 더 큼니다.

금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직접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22년 7월 한 달 동안 4번, 6개월 동안 12회 열렸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2023년 9회로 줄더니, 2024년에는 3월에 딱 두 번 열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사이렌이 울리는 경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도,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저는 서왕진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오늘 용산전자상가에서 티몬·티몬월드·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경제와 민생, 조국혁신당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 김재원 시민의물결 공동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 의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의 맨 앞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총선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찬성토론자로 저 역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당의 강력한 전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군주민수(君舟民水)

탄핵은 결국 국민의 뜻이 물결처럼 흘러넘쳐야 가능합니다.

시민의 물결 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윤석열 정권 탄핵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겠습니다. 143여만 국민적 탄핵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조국혁신당이 튼튼한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 조국 위원장

최근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행사 때 일입니다. 광복절을 부인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등을 돌려 앉으며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불현듯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86년 2월이 떠오릅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출신 박봉식 서울대 총장이 식사를 낭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졸업생들은 야유와 함께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1년 뒤 1987년 2월에도 박 총장의 졸업식사 낭독 때 졸업생들은 등을 돌리고 야유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듯 4개월 뒤 6.10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나중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정권은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군부 독재정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성이 없던 군사정권은 '육법당(陸法黨)'을 만들었습니다. 육사 출신 군인들과 법 전문가인 율사들로 당을 꾸리고 독재정권을 운영했습니다. 군 출신을 '유신 사무관'으로 임명해 정부 곳곳에 심었습니다. 당시 법률가들은 정권의 시녀, 군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이제는 검사들이 우위에 섰습니다. 과거 '육법당'이 이제 '검육당(檢陸黨)'이 된 것입니다. 이들도 인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해갑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후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켜 자기 쪽 사람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앉힙니다.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을 시켜 체제를 공고화합니다.

그 사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첩보부대 쓰리세븐(777) 사령부 지휘관도 충암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곧 국방정보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떠돌고 다닌다고 합니다. 국군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군 정보를 다루는 보직은 다 충암고로 채우려는 겁니까?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김 처장을 전면내세워 10월 장성 인사 때 '친윤' 군인들로 채우려는 것이겠죠.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뇨. 어이가 없습니다. 군 출신 대통령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 믿는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일파들을 정부 요직에 내리꽂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 유신 독재정권’ 수장에다, 조선총독부 10대 총독 자리까지 함께 꿰찰 생각입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일 부역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군사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말입니다.

저는 벌써 그 징후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립기념관장 앞에 등돌린 지식인들 말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마음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서 실제로 등을 돌려 앉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말입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친일을 찬양하는 자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 위헌적 행위이자, 국정농단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 마일리지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는 친일파 대통령이 건국절로 부르고 싶어하는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해괴한 행사가 열립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 벌이는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 선양 단체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야당들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장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개인 성명서를 냈지만, 윤석열 정권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광복회장을 찾아 광복절 행사 참석을 상의했을 정도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의장의 성의는 친일매국 정권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민의 깊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이야 의장님의 선의를 친일의 정당화에 쓰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장님의 결단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에 미친 가정이 만류하는 가족들을 폭행하듯, 친일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 가슴을 멎게 합니다. 독립운동과 외세와의 싸움은 민족의식과 애국의식의 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인사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 국민을 모래알로 만들어 국민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셔도 친일 정권은 국민통합 따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이야 갈라지든 말든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인사들을 보면 백여 년 전 나라를 팔아먹은 일진회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진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국내 여론을 병탄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사건마다 선언서, 유세, 강연회 등으로 매국에 열을 올렸습니다.

뉴 라이트는 21세기 일진회입니다. 이승만도 일진회원이었습니다.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그토록 찬양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 마디로 친일의 피가 서로를 당기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1세기 일진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일진회 회원들과 밀정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손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일진회 주요 회원 이승만에 의해 좌절됐던 반민특위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2016년, 미국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우연히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는 린치 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 중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의회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미국 법무부 검찰담당관은 “린치 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이메일 스캔들’ 사건에서 손을 떼어야 마땅하다”는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 내 측근들은 대통령을 돕고, 검사들은 하염없이 줄을 서대는 작금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보면 어떨습니까? 공정한 수사는커녕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비공개 출장 서비스 수고까지 마다 않는 검찰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특검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는 대통령이 협력 내지 공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 검찰담당관이 “김건희씨 출장 조사는 명백한 특혜이며, 검찰은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로레타 린치 장관의 만남이 심각하게 다뤄진 이유는 결국 이해충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해충돌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모와 처남 등이 모두 수사대상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을 빌리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 조국 위원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추한 꾀변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6월 10일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인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부패방지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기관 권익위가, 야당 정치인에게, 보통의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면죄가 될 판입니다. 이 정권의 무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故 김모 국장은 권익위 핵심 부서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20년 이상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부하 직원 죽음을 두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김 국장은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는커녕 능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무슨 근거에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단정합니까. 귀하가 잠깐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고 국민 권익을 위해 복무하고자 한다면, 김 국장 죽음의 경위를 살살이 따져서 국민께 밝히십시오.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한 외압이라도 있었다면, 또 그런 사실의 규명을 방해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려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 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냅니다. ‘여사 개입 사실’, 오로지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채상병도, 명품백도, 김국장 죽음도 모두 ‘여사 개입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경고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 검찰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심기에 거슬릴까 봐 벌벌 떨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과 여당, 정부기관들은 이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 □ 황운하 부위원장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줄기차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국내 기업은 또다시 ‘김건희 수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차례 거래가 정지됐던 삼부토건의 전 회장은, 바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족 같은 사이라고 밝힌 조남욱입니다. 이미 언론에 여러번 보도됐듯이, 윤 대통령은 소위 조남욱의 관리 리스트 대상자였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여러번 무마시켜줬다는 조 전 회장 차남의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2년 초 1,500원에서 2,000원 선에 머물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정부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재건 열풍을 타고 2023년 7월, 5,500원의 최고가를 갱신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0.06%에 불과하고 현재 있는 해외 법인마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던 삼부토건이 도대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되고, 한 달사이 최대 23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지 김건희 씨의 주특기,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의 적극 가담자로 국토부가 지목됩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1번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보도에 담긴 내용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재건 협력 방안 논의” 등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 국토부는 원희룡 전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두고 ‘국토부, 우크라이나 협력 논의 예정’, ‘우크라이나 협력 논의’, ‘우크라이나 협업 관계 구축’ 등 표현만 달리한 세 번의 보도자료를 삼 일에 걸쳐 연속 배포합니다. 그러는 동안 삼부토건의 주가는 5월 17일 1,039원에서 24일 2,115원으로 무려 203% 증가합니다. 멧쟁해병 카톡방의 이중호씨가 “내일 삼부체크”하라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상황은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6일, 원희룡 전 장관은 “이달 중 우크라이나 재건협의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재건협의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열풍을 주도해놓고 정작 협의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향후 러-우 전쟁 추이 및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국토부가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을 위해 실체 없는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낸 셈입니다.

여당은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 씨 일가는 여전히 삼부토건 지분을 5%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남욱 회장과 자유총연맹을 통해 연결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DYD의 이일준 대표가 ‘바지 사장’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주가조작, MOU 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움직여 부당한 사이익을 취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실이 드러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방아쇠는 국민에 의해 당겨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명품백으로 감사 표시를 합니까?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술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한다고 검토청이라는 오명을 쓴 검찰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10년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수사 내용도 부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최대 공신다운 답변입니다.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 7월에는 조국혁신당에서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하여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

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발 위법 부당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조국 위원장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장 조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옹위와 검찰독재의 연장을 위해 작동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한 법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며 권익위 김 모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에 주력해왔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언론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수사 도중 인격 살인을 당한 배우 고 이선균 씨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영화는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대적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들입니다. 영장 청구서에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게 만듭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조만간 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겠지요.

검사의 ‘검’자가 ‘칼 검’자가 아닐진데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틀입니다. 김건희 씨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공손히 제출하고 진술을 받아적은 검찰의 행태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작태, 절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 <친구> 대사를 빌려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마 해라, 마이 못다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87년 이전 독재 정권의 대통령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불참 이유로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겁쟁이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없는 국회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식 출발 보다 우선된 미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 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처음입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불참 사유로 대통령실은 “특검,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비정상입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티비토론장에 나타났을때 국민들은 누가 비정상인줄 이미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과 가격 875원은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했다가 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렸습니다. 응급실 대란에 대해 또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술한 기행을 반복하며 대통령다운 언행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비정상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은 20%대의 지지율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민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는 불통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국민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나라의 근본이 깡그리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구멍 나고 있습니다. 상급의료원의 응급실이 속속 문을 닫고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진료 가운데 전공의와 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져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수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료위기가 구조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윤석열 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럴 경우 정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11곳을 돌던 열경련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12번째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 투약을 했지만, 이미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실앞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숨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노한 민심은 곧 거리로 뛰쳐나올 것입니다.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분노는 마침내 폭발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사태는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못했습니다. 구출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다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작위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구성요건으로 충분합니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끝은 파면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탄핵의 시계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사유도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싫은 것이 단지 앞서 언급한 표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탄추위에서 지금 하나하나 탄핵소추안의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빠른 정권교체 만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검증되고 해명 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개월만에 갑자기 추가상속이라며 등록한 20억원 재산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또 장녀의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의 심사과정 또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장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준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냐고 묻자, 상기된 얼굴로 ‘의원님,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하며 억울해하는 후보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 한 명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에 대한 재판받게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온 힘을 다 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뇌물이고, 채용도 뇌물이지만 검찰 자신은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는 검찰식 해석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계급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 딥페이크 성범죄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0.8%의 인용율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런중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며, 이진한 검사의 기자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한 장본인 심우정 후보자가 과연 신뢰 받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설득하던 장면과 심우정 후보자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저는 망망대해에 뗏목 하나에 의지해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보도자료와 질의를 통해 심우정 후보자의 문제를 알렸음에도 언론에서는

기사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검찰담당관 시절 주위에 검사들이 모두 떠나고, 수사관들까지 등져 홀로 외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청구서를 작성하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잘 하겠다는 검찰의 사탕발림에 속아 또다시 정치검찰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있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격’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 검찰의 손에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들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불기소라는 방법으로 무혐의를 만들어 줄 것이 뻔한 검찰에게 또 속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손에 맡겨질 사건들이 야권에게는 또 다시 화살이 되어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를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회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실도 진실로 가치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조국 위원장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을 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 위에 전임 대통령의 먼지털이 수사가 메인 요리, 사이드 요리, 디저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논리로 온 가족을 ‘털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언론과 손 꼭 잡고 이 밥상의 ‘MSG’, 즉 여론작전도 펼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국민들의 ‘추석 말밥용’ 밥상은 상다리가 아주 휘어질 지경입니다. 모두 김건희 씨 덕분입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번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 번째 명품백 수수, 네 번째 인사 개입 의혹, 다섯 번째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섯 번째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 일곱 번째 채상병 사망사건 구명 로비 의혹, 여덟 번째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그래서 특별히 김건희 씨 특검에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김건희 씨의 ‘성역 없는 의혹’입니다.

이 뿐입니까.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명절 대목에 환호하는 가게도, 명절 보너스로 지갑이 두툼해진 직장인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지도 양도 줄여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올해 최고로 가격이 떨어진 하얀 쌀밥만 상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준대로 시금치 대신 열무를 먹자니 씹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탈이 나서 갑자기 복통이라도 오면 큰 일이니 차라리 굶는 게 속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먹고 사는 일,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석을 앞두고,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린 것은 ‘사이다’ 발언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눈만 뜨면 쌓여가는 김건희 씨 의혹과 함께 무도함, 무능함, 무지함에 이어 유체이탈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용산’만을 위해 무리수와 헛발질을 해대는 검찰과 해당 부처 직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빌런’인

사로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의 달이 다 떠오르기 전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도 ‘국민농단’도 당장 멈추십시오.

## □ 황운하 부위원장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 사항을 감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22년 결산국회 및 20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고 하면서도 굳이 “서울-양평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족을 붙였습니다. 행여나 용산의 심기를 거스르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2022년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한 △월간진도보고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이며, 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입니다.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납득할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종점변경 부분을 삭제한 데 관련해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은 집중적인 추궁 끝에 “국토부에서 내용삭제를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종점 변경은 용역사와 국토부의 실무단위의 모의가 있었던 것까지 밝혀낸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다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태는 최대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대통령 가족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데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의혹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의 진상 규명은 탄추위 활동의 중점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공약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의원은 김해로 지역구 도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토론회를 지난 3월까지 22차례나 열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공천개입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경선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즉, 공천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이 과정들이 모두 불법적인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시간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정황상 대통령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법 거

부 자체가 위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차 지지도에서 윤 대통령은 23%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에 끝까지 쫓값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조국 위원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다시 짚어봅시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씨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천관리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치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관위원이자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을 공천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용인갑에 전략공천 됐지만 낙선했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퇴직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의 주인공 민간인 신 모씨의 남편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녹취록, 증언 등이 쏟아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이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검찰과 경찰에게 요청하십시오. 자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십시오. 실제적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본인의 ‘텔레

그램’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권해서 휴대폰을 함께 제출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더 빠르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어막이 주저앉기 전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십시오. 때가 늦을수록 국정농단의 증거는 쌓이고 탄핵의 시간은 가까워집니다.

온 국민이 ‘아프면 안 된다’고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성과 같은 군 단위 지역들은 의정갈등이 끝날 때까지 더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집만 피웁니다.

의대 교수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의대 입시를 증원한 대로 시행기로 해서 수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 근거도, 대책도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의대 정원을 50% 증원한 무모한 정부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은 무너져가고 있고 내년 봄에는 전국의 의대에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정갈등으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 지지율 20%, 이것 뿐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는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를 곡성에서 개최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도함, 무능함으로 지역은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곡성과 영광 재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정치 활성화와 혁신과 함께 검찰독재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가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비난 등 과열 양상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할퀴지 말고 비틀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층끼리의 싸움을 부추키는 말을 삼갑시다. 윤석열 정권 좋아할 일을 절대 하지맙시다. 각 후보의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으로 논쟁하고 겨룹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선거 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

위야 하는, 독재를 힘껏 뿌리 뽑아야 하는 한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이점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팩필인베스터먼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응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씨 사이에 한 달여 간 무려 40여회 집중적인 연락이 오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전화는 고발인 조사 언론보도가 나간 9월 23일, 김건희 씨 휴대폰으로 발신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건희씨와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9월 24일에는 7차례나 통화가 이루어졌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25일에는 9차례에 걸친 통화 내역이 통신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많아졌겠습니까? 수사받을 판국에 새로운 투자처 상담이라도 했겠습니까? 수사를 대비해 입을 맞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사 상황과 통화 일정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알면서도, 지금껏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오히려 모조리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에 요청합니다. 김건희씨와 이종호씨의 문자 내역, 떼뻗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몽개기 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비상식적인 기소와 재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호부호형(呼父呼兄)을 못하는 홍길동처럼, 수사기관이 권력에 눌려 주가조작을 주가조작이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BBK 사건처럼 주범은 빠져나가고 공범만 처벌되는 모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씨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증거 확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급하고 선별적,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로 인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뒤 검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찰권 남



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응징입니다. 이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 □ 차규근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관저공사는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 공사 그리고 준공도면조차 없이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된 불법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주도한 것은 실내건축업체인 21그램입니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씨의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해당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21그램이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지난 12일에 발표했습니다. 무려 여섯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은 2022년 4월 24일에 21그램을 관저 공사업체로 미리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5월 25일에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사 착수를 지시하고 공사가 시작된 것은 5월 15일이라는 점입니다.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실내건축업체인 21그램에 지시한 공사 범위에는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증축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 제주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뒤늦게 섭외하여 6월부터 증축공사에 착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섭외한 것도 21그램입니다. 공사 전반을 21그램이 주도한 셈입니다. 그런데 21그램이 섭외했다는 제주 소재 종합건설업체는 정작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이 업체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증축공사를 할 수 없는 전문건설사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그램은 발주처에 보고하지도 않고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또한, 그중 15개 업체는 관련 업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자격 공사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공사는 준공도면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런 상태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관저 공사 전반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와 각종 건설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 이 업체가 보안 시설인 관저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실무 총괄하고, 21그램에 연락을 했던 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 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감사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감사원은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그램은 김건희 씨와 과거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진 업체입니다. 만약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관저공사 업체를 선정한 윗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의 몸통이 누구인지, 혹시 김건희 씨는 아닌지 확실히 밝혀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 이광철 총괄간사

오늘 저희 탄추위는 대통령실 이전과정의 불법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한 국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공간과, 관저의 이전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중하고도 합당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개축,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에 맞는 역량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수행 해야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공간과 관저의 이전은 그 의사결정도, 과정의 진행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한다는 결정에 무속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은 단 한번도 해소된 바 없습니다. 공사업체들은 수주실적이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곳들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고, 관련 검찰수사도 대체

떨하는지 잠잠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천공의 국정개입의혹은 그 어떤 감사도, 수사도 이뤄지는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속에서 천공의 문제와 천공의 국정개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져만갑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의 불법성이든 천공의 국정개입이든, 감사원이 침묵하고 검찰이 방관한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사유를 다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탄추위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박웅등 곡성군수 예비후보

조국이 캐낸 알토란 조국혁신당 곡성 군수 예비후보 박웅두입니다.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가 곡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민심은 1분 1초도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민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벼멸구가 유례없이 창궐해서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수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쌀값이 17만원 이하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쌀값 붕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간의 잘못된 농업정책, 잘못된 쌀값 정책을 펼쳐왔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쌀값 20만원은 반드시키겠다고. 그런데, 수확기에 유례없이 쌀값이 마지노선인 18만 원이 무너지고 17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이며,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살 수 없다. 바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것만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도처에는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자라고 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년이 길다가 아니라 1분 1초도 너무 길다는 마음으로 재선거에 임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 조국 위원장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며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소위 ‘반국가세력’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보수언론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쏟아낸 글의 일부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두 가지가 엮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손절’에 들어간 듯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자신들이 세웠다고 자부해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들고 보위하던 ‘친윤 언론’마저 이제 구제 손길을 뺄을 엄두가 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씨도 용산 회동에 대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상황 악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놓였던 처지가 되풀이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말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가 그 증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2%, 부정은 69%입니다. 2016년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낮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긍정 25%, 부정 64%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은 계속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던 강혜경 씨는 경악할만한 폭탄 발언을 연이어 냅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고 명태균 씨가 지시했다. 이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

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 국민은 이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언동과 행태를 보며 “저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고 영부인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고 탄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대외활동을 자제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완전히 바보”라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자신이라는 김건희 씨 생각이 바뀔까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하고,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란 포부를 밝히는 김건희 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수십 년 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질서 중단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우리는 지금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26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이 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야 합니다.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내립시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장님 무사가 칼을 휘두른다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 망나니 칼춤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정치는 민심보다 반발짝 앞서가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탄핵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는 대통령 탄핵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대통령 탄핵요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탄핵요건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박근혜 탄핵재판과 연결시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조직을 동원한 점 둘째,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한 점이 그것입니다. 이중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씨가 국정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증거들도 공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의혹,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탄핵사유입니다. 검찰권을 동원해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소추안의 국회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 불기소에 따른 국민들의 검찰을 향한 분노에 입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사탄핵은 지엽적입니다. 본질은 검찰해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뒤로 미루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거짓이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집권한 이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건 집권 후 검찰권을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면 아직은 집권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조기종식될 날이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과 함께 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무허가 관저에서 나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용산의 하청을 수행하는 김건희 용역로펌이 되어 법 앞의 평등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데에 앞장서고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도 무혐의,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도이치 주가조작도 무혐의, 대한민국 최고 존엄 김건희에게 검찰은 알아서 무혐의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코바나 협찬사들 간의 대출 특혜 연관 의혹이 있음에도, 주포가 지시하고 김건희는 매도하는 명백한 주가조작 가담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눈과 귀를 닫고 국민의 외침을 무시한 채, 원청 용산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자발적인 핸드폰 반납은 덤이었습니다.

7만 8천 원 법카사건에는 130여 차례, 품도 안 드는 건당 600원짜리 압수수색으로 온갖 품을 다 잡더니 300만 원짜리 명품백과 총23억원 수익 추정,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핸드폰, 주거지,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아무 사건이나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에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명태균은 김건희·윤석열 자택을 수차례 방문해서 집의 구조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앙지검장답변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김건희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의 범죄 피의자 감싸기는 국민 분노만 자극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세상 어느,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가 현금자산 80%를 한 종목에 몰빵 하고, 23억 원의 수익 실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김건희 용역로펌! 윤석열 검찰은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김건희 발 국정농단 의혹과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실체, 대선 마지막 9일 동안 데일리로 보고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식 회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고, 강혜경 씨 증언대로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공천이었다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와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자격 업체가 공사한, 준공검사도, 도면도 없는 불법 증축 건축물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의 작품으로 의심됩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무허가 관저에서 나와 당장 수사부터 받아야 할 판입니다.

특검의 대상과 필요성은 늘어났고, 많은 시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를 감지한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외침에 이제는, 용산이 답하고 책임질 차례입니다.

## □ 신장식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 / 시민의물결 공동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주술사의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질문인데 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누구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 씨는 여당을 상대로 위증죄 고발을 협박하며, 공적 대화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공천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권 핵심 사건마다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 사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무속인에게 의지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을 주술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짓 주장으로 대통령실을 모독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명씨를 즉각 고발하십시오.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모든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지 영부인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주가조작 연루, 관저 관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주작'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추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작과 주술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 조국 위원장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대통령 파면만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행한 직무상 중대한 비위에 대해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 그게 ‘탄핵 소추’입니다.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탄핵 심판’입니다. 이는 국회나 정당이 제멋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기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제어장치이자, 잘못했을 때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의 깃발’을 들자 어처구니없는 비난이 들립니다. “헌정질서 중단을 바라는 것이냐, 국민을 자극하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행위 아니냐, 왜, 지금이냐”. 그렇지만,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탄핵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르더라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탄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과 법률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행동해왔습니다. 민심에 따라 가장 앞장서 행동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수차례 경고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김 부부는 위헌,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선선히 해야 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탄핵이 있습니다.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권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휘둘러대는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집권 여당도 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뜻을 받아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보수를 재건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겪은 2년 반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담대해집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립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따른 손실과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손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냅시다.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부패완판 정권입니다. 검사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내로남불 정치검사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나라 전체가 부패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를 자백하는 녹취가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열 개가 넘는 ‘명태균발’ 단독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 “하여튼 입 조심해야돼요. 난리 뒤집어진다” 공천거래, 매관매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녹취만으로도 김건희, 명태균 모두 당장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김영선 의원을 고리로 명 씨가 개발 이권에도 개입한 정황도 보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사인인 명 씨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에게 창원산단을 청탁하고 국토부 현장 안내까지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을 소속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세월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처박아두고 입에 단내나게 수사한다고 뻔뻔하게 거짓 말을 늘어놓습니다. 강압 수사로 수많은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김건희 씨 앞에 서는 배를 드러내고 눕습니다.

신성가족에게 검찰은 주특기인 ‘몽개기’를 시전합니다. 신성가족의 명줄을 쥐고 있는 명태균 씨에게도 검찰조사는 피해갑니다. 녹취는 공천도, 국책사업도 모두 청탁의 대상으로 김건희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은, 김건희 씨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최대의 국정농단을 검찰은 몸을 던져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검찰해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담당 수사 검사들이 자신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느냐, 자신만이라도 특검 수사대상에서 빠지느냐,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검찰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정치검사들만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순장될 겁니다. 이미 명품백 ‘무혐의’에 이은 주가조작 무혐의로 검찰 내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자료 외부 유출은 그런 맥락입니다. 검찰해체와 윤석열 탄핵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는 무너집니다. 지금 둘이 쌍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공생관계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은 고쳐 활용하기에는 너무 썩었습니다. 해체 후 새롭게 편성, 즉 해편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이태원참사 2주기였습니다. 국회에서 추모제가 개최되어 유가족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국무총리도 그냥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국

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저야 하는지 기본조차 모르는 공적 마인드 제로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법적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명품백은 청탁 아닌 감사 표시라는 검찰, 공천으로 감사 표시하는 여사?〉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했다)” “자기 선물이라”. 어제 보도로 새롭게 확인된 명태균 발언입니다. 여사가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0만 원짜리명품백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라면서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준 윤석열 검찰이, 공천으로 감사 표시를 한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이자,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8일전에 민간인 신분인 여사의 입으로 새롭게 집권한 여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인됐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여사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명태균 말에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은 확인된 것만 3억 7500만 원입니다. 민생은 박살이 났고, 정국은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생을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책임은 무능이 기본값이었는데 각종 부패 의혹까지 추가한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국가원수의 중대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힘 등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협조가 시급합니다.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핸드폰 반납을 곁들인 김건희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이, 공천은 감사 표시라고 한 여사에게 과연 죄를 물을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은 특검 수용과 퇴진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결단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 정춘생 명태균게이트위원장

여론조작, 정치공작, 공천거래, ‘창원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완전히 의지하는 선생님’ 명태균과 함께 정치, 당무, 선거뿐만 아니라 인사와 행정까지 쥐락펴락하며 사실상의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로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최소 8건 이상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공표 조사이지만 외부 유출을 의도했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왜곡·조작된 정보를 토대로 선거를 치러졌음을 의미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둘째, 공천거래 의혹입니다.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이 무려 3억 7천 5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국민의 힘 회계보고에도 없고,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 회계보고에도 없었습니다. 즉,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개인채무를 갚는 대신,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씨를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씨의 표현대로 ‘사모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공천 대가로 3억 7천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면제받았다면, ‘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셋째, 창원 첨단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 첨단산업단지 선정(23년 3월)과 관련하여 창원시 공무원들이 2022년 연말에 명태균씨에게 대외비 문건 다수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부터 명태균씨는 산단 인근의 부동산 개발에 관여, 투기성 매매를 주위에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 지위와 권한도 없는 명태균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김건희씨의 공적 행보를 위해 국민혈세 1원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興-興 내전’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며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오빠’, 제발 철 좀 들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국민이 돌을 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야이거나 탄핵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 □ 조국 위원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기자회견도 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담화는 대통령의 중차대한 정치행위입니다. 담화에서 국가적 갈등과 난제를 극복할 의지를 밝히거나, 방법과 지향을 제시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국민께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는 국가원수로서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감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정신승리’만 보여줬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의료개혁 논란 때 대국민담화를 했는데, 모두 그랬습니다. 당시 내놓은 약속 중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말이야?”라는 무심하기 짝이 없는 그말만 기억에 남긴 이태원 참사 현장방문, 사과 없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만 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여된 공감 능력과 m무책임만 지켜봤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774억 원을 쏟아붓고 망신만 산 부산 엑스포 유치전, 사우디에 119대 29로 참패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겐 상실감이, 대통령 부부에게는 각국 순방 사진이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전 정부 지원 부족을 꼬집는 등 남 탓에 열었습니다.

4월 총선 직전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부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의사 욕심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삼은 협박성 담화로만 기억됩니다.

내일 대국민담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어때야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혁신당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내일 담화는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국가재정 파탄과 민생, 경제, 교육, 외교 등 국정운영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오. 무엇보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점을 백배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해결책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백하십시오. 국정농단과 위헌·불법 행위를 소상하게 국민께 고하십시오. 배우자가 뭘 잘못했는지, 그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명태균, 천공 같은 술사들과 관계는 무엇인지, 채해병 사건 등을 어떻게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모든 국민 앞에 소상히 자백 하십시오. 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와 학계로 불러 들였는지, 일본에는 굵실대며 무엇을 약속해줬는지 반성하십시오.

세 번째, 약속하십시오.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채해병 사건 조사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훈포장해야 합니다. 그는 직분에 충실한 참 군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토록 하고, 대통령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십시오. 범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십시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실제 조치를 하십시오.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십시오. 무엇보다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이 무엇이든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위의 사항은 담화문 채점표로 국민들이 하나 하나 따져볼 것입니다.

내일 담화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박절하지 못했다” 운운하면, 지난 총선 때 경험했듯 거센 ‘담화 역풍’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쳐 국민적 주의를 환기한 점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았습시다. 일부 ‘친윤 언론’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보호하고 감쌌습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더 적극 검증했다면,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더 파고들었다면,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책임도 있습니다. ‘최순실 정국’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1월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시다.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 기자였던 고(故) 헬렌 토마스는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 기자회견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언론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진실을 캐내 주시기 바랍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2022년 4월 18일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말합니다.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거야” “김진태가 별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라고요” 김영선 공천을 확인한 날인 5월 2일에는 “아침에 다 보류시켰어.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줬고”라고 말합니다.

김영선은 축하를 전하는 강혜경에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하지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공천이라는게 방망이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 뒤집힐 수가 있어”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6월 지방선거 후에 명씨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입니다.” 이러대.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이 이상의 무슨 ‘명백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명태균은 김진태, 김영선, 박완수 등 여당 중진들의 공천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김건희라는 ‘황금줄’을 잡고 ‘어둠의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집권여당 공천을 농단했습니다. 명 씨 표현대로라면 ‘밖에 묶어 둔 개’에 불과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김건희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를 지키는 역할에 불과했을 겁니다. 정작 정 실장은, 자신이 무엇을 지키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공화국 헌정 유린이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석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굳이 담화를 해야한다면 “하야하겠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말도 안통할 것입니다. 백악이 무효인 상황을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다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힘을 다했습니다. 거부권은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재의요구를 한다면 이번에는야말로 국회가 재의결할 것입니다. 이후 탄핵열차는 속도를 낼 것입니다. 11월 말은 그렇게 ‘윤건희 정권’ 몰락의 서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곧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전히 200석 확보 문제나, 현재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정치적 상황은 흡사했습니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민심의 파도가 모든 것을 바꿀것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임기 반환점, 남은 임기를 국민께 반환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탄핵과 퇴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란 점도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대통령의 결단은 없고, 국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불통·맹탕 기자회견을 예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달 중순 페루와 브라질 순방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론을 떠보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대통령의 육성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는 녹취에서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서 2년 실형을 받아냈던 바로 그 법과 그 죄입니다.

과거, 정진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실장의 제안대로 임기라도 반환하는 것이, 남은 19%의 국민을 위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라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민 손에 끌려내려오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비서실장이 과거 소신대로 대통령에게 충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여당 대표는 당이 망하든 말든 김건희를 살리려고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고, 김건희의 수

하로 전략한 윤석열 검찰은 조직이 해체되고 문을 닫든 말든 대통령을 지키려고 범죄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3억 7520만 원에 맞바꿨다는 공천거래 의혹부터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에도, 구속과 탄핵을 피하기 위한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심각합니다. 애꿎은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 버릇 탓에 국민을 섬기며 헌법이 정한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버겁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책임 정치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 조국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자폭·자백’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안으로 ‘휴대폰 교체’와 ‘골프 연습’을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음주보다는 골프가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그간 국정 난맥상은 자신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프로토콜’, 즉 의전대로 사용하지 않아서랍니다.

2021년 정치 입문 후 대통령 휴대폰으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대신 보낸 것을 “순진해서” 그랬다거나, “지지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미담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이 기이한 부부 행태가 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 휴대폰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을 담은 메시지와 문서, 통화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보고 정책 결정에 간여하고, 답변을 대신 보냈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격없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간여했다가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 인멸’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잦은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공천 등 당무개입도 대통령 부부의 통화를 통해 전개됐습니다.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명태군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즉각 이 두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민간인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니, 임의 제출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단’이 압수하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들 부부가 문제의 휴대폰들을 없앴다면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게 정식으로 묻습니다. 두 분의 휴대전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우왕좌왕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 한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커질까 봐 꼬리 자르기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이틀 앞둔 5일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형, 형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대표 선거 때 약속한 채해병 특검법을 대표 취임 후 반대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그만 반대도 못하는 졸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겠지요. 한동훈 대표는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통속입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당과 검찰에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런 특검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기가막힌 헛소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 추천권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또는 본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국정농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심이 아니라 ‘형과 형수의 마음’을 택한다면 그 뒷일은 자명합니다. 8년 전 당했던 일이 고스란히 재연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오늘 여의도에서 탄핵다방을 엽니다. 정치검찰 해체, 김건희 씨 구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오늘 국회에서 발족합니다. 두 달 전,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할 당시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참여의원이 40명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탄핵 불가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물론 향후 여권 의원들까지 포함해 참여자 수 2백명을 훌쩍 넘겨, ‘나라를 바로잡는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국민담화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지 이들이 채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골 프장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문시 ‘골프외교’를 대비해서 맹훈련을 한 거라는 식으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뇌물수수 피의자인 윤우진 세무서장과 영종도 스카이72에서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그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는 데 그리고 골프치는데만 진심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뇌물수수 피의자와 접대성 골프를 친 분이라면 평소 얼마나 골프를 치고 싶었을까 그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검찰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쿠데타로 집권까지는 성공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언감생심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조만간 지금의 그 자리에서의 하루하루가 창살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난 민심에 의해 탄핵당하고 쫓겨나기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놓고 골프도 치고, 좋아하는 술도 실컷 즐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행복을 되찾는 길입니다.

## □ 조국 위원장

“탄핵이 답이다, 3개월도 너무 길다, 찬성, 찬성, 찬성...”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온라인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개설 하루 만에 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심경은 바로 ‘비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행태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망나니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치는지, 악몽을 꾸는 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은 온라인 탄핵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1만의 의견이 10만, 100만으로 늘어나면 탄핵 에너지는 그만큼 축적될 것입니다.

광장의 탄핵 열기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와 보수적인 대구·경북 도심에서, 군 단위까지 곳곳에서 ‘탄핵’ 촛불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뻔뻔합니다. 국민 울분을 모르는 척 합니다. 시국선언문이 속속 발표되고 촛불 행진이 이어졌으니,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 흘렸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뭔가 반응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개입 게이트’는 못 본 척, ‘명태균 게이트’는 못 들은 척합니다. 알고 보니 김건희 씨는 정권 출범 전부터 국정 일인자였습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김건희 씨는 7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초청자는 600여 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초청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됐습니다. 명태균 씨 등 공천개입·관저·주가조작 관련 인물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의 축하 파티였던 셈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영입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주요 보고서를 김 여사 몫으로 하나 더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선이고,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경선이나 공천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 합치면 내각을 구성할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서초갑 조은희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론,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등 후보 공천에 명태균 씨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장 인사, 대통령실 행정요원 채용, 창원시 공무원 인사, 경남 지역 공공기관장 선임, 복지부 장관 추천 등 인사 개입 의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명태균·윤석열·김건희 공동기획’ 없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이고, 전체 거부권 행사는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한 입으로 특검 자체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밑에서 수사 검사, 공판담당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 한 대표가 이제 특검은 위험이라고요? 2016년 윤석열·한동훈은, 2024년과 다른 사람입니까? 목적과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고 선서했다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해봐야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탄핵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더 채워 넣을 것입니다.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 이 정권의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촛불로 온기를 더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든 촛불, 절대 꺼뜨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채해병 순직 수사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명단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방탄’에 막혀 국회 국정조사로 첫발을 떼게 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조사를 결단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혹은 본질은 대통령의 수사외압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수사를 축소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기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지키려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만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죄를 법률 위반 사항으로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대가를 정권의 명운과 바꿀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중 배우자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자녀공제액도 5천만원에서 무려 10배 올린 5억으로 올리자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액 구간을 3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감세 정권’, ‘기득권 지키기 정권’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자는 상속세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입니다.

공제액 상향에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해도, 한꺼번에 두 배나 올리는 것은 계급간 위화감이 생기는 일입니다.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말도 안되는 노골적인 ‘재산 대물림법’입니다.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들의 탄식소리가 들립니다. 국회는 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 정춘생 명태균게이트위원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어도, 탄핵은 막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15가지의 탄핵사유를 담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 공개 이후 매일 같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탄핵의 근거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만사순통의 시대가 가고, 만사영통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사인인 김건희씨가 대통령실의 주요 보고서를 받아 보고 김건희씨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이 용산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전방위적 국정 관여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야기되던 공천 개입은 물론,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취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통한 국정농단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거부권 자판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적 배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연세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60곳이 넘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 지역 시민사회에서 “명태균발 국정 농단은 현실이 되어가고,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아내 방탄을 위해 쓰며 정권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마냥 참기만 하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어도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은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조국 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은 정말 참담한 날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15가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탄핵소추문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입니다.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에 있고요, 반드시 형사처벌 될 사태인 것입니다.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합니다.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되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 되었고요.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 □ 조국 위원장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뒤 검찰과 국민의힘 행보가 빨라지는 듯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방탄 법무법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뉴라이트친일 정권,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들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윤석열 내란 죄를 수사하겠다고 내란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학연으로 엮히고 설킨 검찰입니다. 검찰 내란특수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현대고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매우 긴밀한 사이입니다.

12.3 내란 주범중 한 명인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은 제 발로 이 검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윤석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것인가요? “내란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니, 내란죄만은 피하게 해달라,” “김용현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위자” 이런 것인가요? 어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조국혁신당을 싸늘하게 쳐다보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귀하는 용산의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렇게 그림을 그렸나요?

검찰로서는 속된 말로 ‘꽃놀이 패’를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죽일지 다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자랑할 셈인가요? 가소롭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희한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애초 김용현 씨 등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를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신속히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과 군사 반란을 범한 현행범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국수본에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가는 국수본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에게 충구를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면서 120명이라는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사는 국민을 믿고 배포 있게 성큼성큼 행보해야 합니다. 국가수사 본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입니다.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입니다.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 합니다.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썩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3쿠데타 잔당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통해 이들의 장관 직무 배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야당과 상의해서 급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씨 탄핵 소추를 지치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여당 의원은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물론 소장파 의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이 생명을 얻는 즉시, 윤석열 씨 임기는 헌법 재판소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끝납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12.3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탄핵이나 하야를 제외하고,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 이양은,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를 뜻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은 왕이고 한 대표는 세자입니까? 대통령 권력이 밀실 거래 대상입니까? 어제 오늘 내란행위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한 짓거리는 내란세력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12.3 내란에 이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질서 안에서 행해집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이



직무배제가 되면, 그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을 의미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세자 노릇을 멈추십시오. 국민 모두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정 놀음을 멈추십시오!

어제의 탄핵 표결은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표결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 문제일 뿐 탄핵 가결은 명약관화 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쌌던 시민들의 함성과 분노는 결국 국민의힘을 굴복시킬 것이고, 국민의힘은 때늦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민을 배신했고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혹독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신뢰를 상실한 한동훈 대표와 내란 공범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이 지금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며 알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겠지만 모두가 허망한 짓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착각일뿐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을 우회해보려는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부결 사태는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것입니다.

가장 신속하고 질서있는 수습방안은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일 뿐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탄핵을 통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신속한 탄핵과 윤석열 구속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람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동설한 심야에 군대의 국회 진입을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과 본관 건물에 난입한 군인들을 목숨 걸고 막은 야당 보좌진들 덕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확보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 대표는 시민들과 야당 보좌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시민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배신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 □ 신장식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 / 시민의물결 공동위원장

한덕수 한동훈 공동 담화는 내란 방조범들의 2차 친위 쿠데타 선언입니다. 두 한 씨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단 두 기관뿐입니다.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두 사람이 주례회동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오늘 공동 담화는 2차 친위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제압 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부터 탄핵하겠습니다.



## □ 조국 위원장

조국혁신당이 내건 깃발은 두 개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정치 검찰 해체하자.”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깃발의 정당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인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광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가 광 사령관님에게 질문할 때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지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지요?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지요?” 광 전 사령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의 질문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지요?” 광 전 사령관은 다시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범인 바뀌치기, 사건 몰아가기, 동족 보호하기 등 검찰이 늘 해오던 ‘공작 수사’ 기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검찰은 손 떼십시오. 법적으로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확보된 신병과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십시오. 나중에 영장 청구와 기소할 준비나 하십시오.

갈수록 12.3 내란 사태는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전인 12월 1일 비화폰으로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 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시국수습 방안 수립은 2024년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척결안’과 닮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의 순차 모의는 2024년 충암과 등 요직 인사 참여 공관 회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에 실패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내란죄 기수(既遂)가 됩니다.

윤석열 도당의 처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일 탄핵소추안은 다시 국회에 오를

것이고 혹시 처리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리멸렬, 좌충우돌, 우왕좌왕입니다. 원래부터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지경이 돼서도 내가 옳다. 니가 그르다.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권을 누가 노릴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열차에 오를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시간은 국민편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도 함께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 □ 황운하 부위원장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음흉한 흥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관할도 아닌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낼 때부터 짐작했던 일입니다. 대통령을 건너뛰고 일개 장관에 불과한 김용현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전체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집단 검찰이 제 버릇 개 못 주는 짓을 또 한 겁니다. 윤석열 내란의 실질적 뒷배가 됐던 검찰이 앞뒤 분간 못하고 날뛰는 형국입니다. 당장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과 담당 검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특수본 자체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촉구결의안을 내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참여할 자격도 명분도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검찰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검찰세상은 윤석열과 함께 끝났습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놀음도 끝났습니다. 검찰에게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단죄만이 남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의로 민생 예산들은 전혀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민생 예산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의 행태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예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도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권력기관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투명한 예산 항목들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이 삭감된 예산을 두고, 어떤 작당을 꾸밀지 국회는 엄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검찰의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편성된 수사 예산에는 이번에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고, 정부는 검찰 수사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수사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민주화가 곧 권력의 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 □ 정춘생 명태균계이트위원장

“문 깨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어제 국방위에서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계엄해제’ 저지를 윤석열이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조국 대표 등 정치인 체포와 무력으로 국회 계엄 해제 저지를 지시하는 등 내란을 직접 지휘한 내란수괴 윤석열, 군 투입을 지시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포고령을 발표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한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내란을 공모한 국무총리 한덕수,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모두 12.3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국회는 어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등 절차적 어려움을 핑계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공수처와 협력해 영장을 받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박세현 본부장과 김종우 차장검사, 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 지휘부 5명 중 4명이 범죄자, 윤석열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내부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조국 대표의 “검사가 내란 음모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심문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내부자들’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내란 사건에 개입해, 사안을 축소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하들과 함께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곧 탄핵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탄핵’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집순이 집돌이 연합’, ‘걸을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전국 얼죽아 연합회’ ‘전국 얼죽코 연합회’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전국민주묘충’과 ‘범야옹연대’ ‘전국 수족냉증

연합’ ‘전국 웹소설 읽기 연합회’ ‘전국 휴학생 연합회’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모두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깃발과 응원봉은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두 번의 패배는 없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탄핵’은 시민입니다.

## □ 김선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곳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오니 자부심과 분노가 함께 치밀니다. 저희는 자부합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의 물꼬를 튼 정당, 실제 물 길을 닦은 정당, 저희 조국혁신당입니다.

관저에 웅크리고 있는 윤석열 씨, 잘 들으십시오. 귀하는 조국 가족을 멸문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국은 다시 살어나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쳤습니다. 7월 무더위 때 혁신당은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했습니다. 15가지 사유를 담은 소추안 초안을 11월 공개했습니다. 귀하가 내란을 시도한 바로 다음날 아침 날이 밝는대로 소추 1차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간 탄핵소추 의결서 초안은 이제 도착하실 이 광철 총괄간사가 새벽에 눈을 비비며 쓴 것입니다. 야당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보태 제출했습니다. 자랑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안에서 듣고 있을 윤석열 씨, 네 번이나 대국민 담화하며 몽니 부릴 땐 언제고,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머리를 박은 꿩처럼 숨어있습니까? 당당하게 공조수사본부에 나가서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했다”라고 다시 말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출석 요구서도 반송합니까? 담화에서는 법적, 도덕적 책임 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곧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감시와 지지의 눈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될 것입니다.

혹시 변수라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입니다. 탄핵 결정은 6인 이상 재판관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6명중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국회는 신임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 지명이 아닌 국회 지명입니다.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란동조당이라는 비판을 듣는 여당입니다. 그러다가 ‘답이없당, 내일은없당, 해체가답이당’ 이라고 불리게 될 것

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촉구합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즉각 임명하십시오. 한 대행에게는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권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탄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정권 만악의 근원,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8월 28일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지만, 힘을 회복하면 다시 독이든 이를 들이댈 것입니다. 다시 윤석열 같은 괴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구호를 외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심정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 안에 숨은 윤석열을 체포하라”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본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 시도도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되었습니다. 심지어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조차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둥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망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한밤 국회의사당에 헬기가 난입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했고,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고, 조국 대표·이재명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구금하려 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란수괴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혀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수치입니다. 공수본은 한시바빠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경호처의 수사 방해는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는 무거운 죄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탄핵은 그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 뿐입니다. 수사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저 겁많은 윤석열은 처벌받게 두려워서 관저에 뽕뽕 숨어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공수본에 출석하라 감사합니다.



## □ 김선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즉 탄추위 활동을 마감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이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 총리를 ‘양지만 쫓는 해바라기 형 공무원’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복심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그 수괴에 그 부하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어제 거짓말로 범벅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70% 넘게 탄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탄핵 횡방을 놓습니다. 혹시 국민 100%가 찬성해야 하는 독재 국가의 총통을 꿈꿨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고 해놓고, 여당과 극우 눈치만 보며 자기 멋대로 정무적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과 관련해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미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고유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국회가 임명한 후보자 임명 부동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야말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무슨 자격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합니까? 합의가 안 되면 영원히 시행 안 합니까?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격을 향해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이 돼달라고 했습니다. 대치 국면을 빚대 “정치로 풀지 못하는 철부지”라고 욕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왜 이럽니까? 윤석열이 파면되면, 자신도 내란죄로 처벌받을까 그러니까? 혹시 윤석열이 복귀하면, 5년 내내 총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 여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당이 “내년은 운수 대통이니 버티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내란범들이 ‘최수의 딜레마’에 빠진 양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총리에게 계엄을 보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적극 가담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내란 범죄자 퇴출이 국정 안정의 지름길입니다. 야여 모두에 촉구합니다. 우선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총리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실하게 수사받으십시오. 귀하는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도 국무위원 자리에서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표 계산하지 말고 즉각 쫓아냅시다. 정의의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목표를, 윤석열에서 더 넓히겠습니다. 내란 잔당을 상대로 하는 모든 탄핵의 선봉에 조국혁신당이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황운하 부위원장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입니다.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가소롭게도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막기 위해 혹세무민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란 공범 한덕수가 가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황당하게도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야 어찌되었든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란잔당들이 목숨을 걸고 내란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세력에게 한 숨 돌릴 시간이란 애초에 없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면서 민주주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로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육법당에서 법육당이 된 것이 다르다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위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까지 호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체를 각오하면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한도 없는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다가, 내란죄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고 국수본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찰 생존을 위한 태세 전환이라, 속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하고 난 이후에도,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노골적으로 내란죄 수사 방해를 시도했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세력의 편에 서는 게 낫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고이 해체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내란 동조 검사들과 윤석열 부역 검사들을 철저하게 단죄해야겠습니다.

한덕수를 필두로 한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등 내란의 핵심 공범들이 여전히 발호 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 예산을 끊으라는 윤석열의 ‘쪽지’를 숨겼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무를 주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

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내부고발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내란동조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들어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단호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탄핵을 가결했지만, 내란세력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탄핵을 주저하지 말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춘생 명태균계이트위원장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2월 29일 시한으로 3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막가파식 버티기’에 국민은 참다못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은 사상 최대치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나고, 국민이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해야 할 일은 답이 없는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입니다. 내란수괴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자처하며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어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도, 대법원장 추천 몫도 아닌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요청서의 이름도 ‘임명동의안’이 아닌, ‘선출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행태는 마치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한덕수 대행에 의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속히 내란이 진압돼야 국정이 안정됩니다. 대통령직을 대행하랬더니 내란수괴를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과 탄핵 심판 방해에 동의하는 국무위원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국정에서 손 떼십시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잘 버티고 있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이 구속된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었지만, 내란수괴와 내란세력들이 없는 새로운 한 해를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성명문

##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중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술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략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

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쉼터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상범 법률위원장(탄추위 산하 탄핵소추안준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가지 사유를 소추안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입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 및 공익실현의무 위배가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실현의무 위배 및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역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의 혐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입니다. 감사원법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여러 가지 사익 추구나 뇌물 제공의 혐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부분입니다.



먼저 거부권을 남용한 부분입니다. 헌법 53조에 따른 이익 충돌 등의 경우에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배하여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 2회 또 채해병특검법 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수근 해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입니다. 사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죄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입니다.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으로 이에 세관직원이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한 축소 외압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의민주주의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추출하는 등 당 대표 선출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공천 등에 개입 하는 당무개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이 사안은 다시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국정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국정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포괄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또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밖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뇌물죄 위반 등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산단이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문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도 침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 검증을 법률의 취지에 반해서 위법하게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을 통해서 행안부 경찰국 역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 감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계약하여 검찰권 남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정원 개혁을 퇴행시키는 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업무 규정도 시행령 통치에 포

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헌법 전문 등을 위배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전문을 위배하였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를 통해 역시 헌법 전문 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의무 및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하여 부작위를 통한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고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했습니다. MBC 등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으며,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역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한 배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발언**

2024. 12. 4. 새벽 04:40 / 국회 본회의장 앞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는 내란이었습니다. 군사 반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었습니다.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2시간 반 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선포 해제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를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군사반란 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입니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의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 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5.18 재관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씨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국헌문란이자 군사 반란인 이 불법 계엄을 따를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국군에게 경고합니다. 군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계엄을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행위입니다. 군 형법 5조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어떤 공무원들도 모두 불법행위에 동조한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즉각,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더 보텔 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을 21세기에 재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입니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윤 대통령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헌법에 이 경우 체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계엄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지극히 평온하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술 취한 듯이 대한민국을 몰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 선장은 병벽을 향해 배를 몰 듯, 대한민국호를 국민을 향해 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온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질식시켰던 독재정권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윤석열은 내란과 군사반란은 물론, 계엄법 위반 등 위헌과 위법행위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만들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도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

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정당이 모여,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제 어떡할 것입니까?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선택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탄핵됨은 물론, 형사소추되어 재판정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왔습니다.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입니다.

구체적 고발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절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셋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 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시에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헌법정신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백히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발자들의 내란혐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하였고,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니 국가기고나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합니다.

둘째로,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 감독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할 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피고발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김용현의 위헌, 위법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등에게 지시하여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언론인 등의 국회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바, 이는 형법 제87조 제2호의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그리고 다수의 성명불상자 등은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모작당하여 내란 범행을 결행하고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신속히 엄정 수사하여 그 범행의 전모를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첫째,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사안이 엄중하므로, 피고발인 등의 반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군인 등의 내란죄 부화수행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특정시 이를 신속하여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간에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 등에 대한 신속한 출금금지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하였으므로 그 범증이 명백합니다. 또한 다른 피고발인들의 경우도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출금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들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합니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또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하여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시간부로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합니다.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공화는 군주가 아닌 국민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주인을 참칭하고 국헌을 문란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란,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40 여년 전 이 나라를 휩쓴 충격과 공포가 재현되었습니다.

12.3사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역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 모시듯 윤석열을 받듭니다. 심지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위헌과 위법한 행위를 했고, 자백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 지위를 내던졌습니다.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체포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단지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일 뿐입니다.

이에 저희는 윤석열 씨,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규정합니다. 윤석열씨와 그를 수괴로 하는 무리들은 단 한순간도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저들이 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왜 국민들이 저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숨죽이며 조마조마해야 합니까? 바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씨가 자진해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

장 질서 있고 규범을 갖춘 절차는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립니다.

하나,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바로 와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즉시 모읍시다.

하나,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합시다.

하나,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몇 번이고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하나, 이제부터 전국의 군인, 공무원들은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최고의 위협입니다.

하나, 윤석열 탄핵을 위해 선도적으로 싸워온 조국혁신당은 최후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 내란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12. 6 10:30 / 국회 본청 계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사태’는 반헌법적 불법 친위 쿠데타입니다.  
중대한 헌정 문란 범죄입니다. 내란죄, 군사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경고, 국민 홍보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총압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  
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인형은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모처에 수감하려  
던,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25번이나 오남용했  
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또 무슨 불법을 또 저지를지 모릅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 있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에게 호소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범죄  
인을 즉각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12·3 사태’를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  
찰과 경찰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무슨 작당을 했습니  
까? 그리고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또 무슨 작당을  
했습니까?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박성재 두  
사람 모두 윤석열의 공범에 불과합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윤석열 일당 요구에 협조해서 안 됩니다. 군사반란 무리, 중범죄자들과  
공범이 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군사반란에 관계된 고위직 군인들,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강제전역 시킨 후 수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사람씩 이름을 불러 보겠습니다.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중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중장,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준장,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세운,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란군을 보냈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털어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현재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장관직무 대행인 김선호 국방차관은 즉시 이들의 지휘권을 빼앗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끝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한 줌의 무리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극우 유튜버들 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즉각 윤석열의 직무 정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 윤석열과 함께 갈 것입니까?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놔뒀다가는 특하면 비상계엄 선포 같은 미치광이짓을 또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체포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원수(怨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즉각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탄핵소추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즉각’ 탄핵소추에 들어갑시다.

7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규탄 조국 대표 입장

24. 12. 7 21:20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12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되어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 군사 반란을 획책하고 실행했습니다.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귀하들은 자랑스러우십니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았으니,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까요? 임기 단축 개헌하고, 당신들은 배지를 계속 지키고,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겨울만큼 차갑게 다가올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입니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언론에 자백했습니다. 윤 씨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이미 부인당했습니다. 국민은 그를 거부했고, 국무위원들은 충성을 거두었습니다. 통수권자인 윤 씨를 향해 군은 “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씨는 여전히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씨 옆에 뭐가 남습니까? 100여 명의 의원들만 남았습니다. 딱 한 줍입니다. 그럼 이 100여 명은 언제까지 윤석열 씨 곁을 지킬까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죄상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매주 의원 10명씩 탈출할 것입니다. 때만 되면 하는 ‘대국민 큰 절’ 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소추안을 거부했다고요? 국민에게 비상계엄, 내란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구니까?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공포를 안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전 국민은 국민의힘을 ‘반란 잔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당신은 거기 앓을 자격이 없다!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합니다. 비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차가워야 합니다.

질서 있게 분노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2차 계엄, 혹은 시위 진압 꼬투리를 쥐서는 안 됩니다. 한분 한분 가슴에 돋는 분노를 누르고, 꾸준하게 싸울 체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촛불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000만명이 촛불을 들었던 8년 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습니다. 격노는 윤석열이나 할 일입니다. 우리 시민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문제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4.19, 5.18, 6.10에서 이겼습니다. 8년 전 촛불혁명에서도 이겼습니다. 2024년 2차 촛불혁명도 마침내 이길 것이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 받고야 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계속 탄핵소추안을 내겠습니다.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선도적으로 외쳐왔습니다. 탄핵의 쉼빙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식 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과 이 수상을 같이 축하하고 싶다”라  
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국가 폭력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의 역사는 길었습니다. 떨리는 5.16, 12.12, 5.17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가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폭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피를 흘렸고, 죽었습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그런 일이 끝난줄로 알았습니다.

웬일입니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자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  
고 총을 든 계엄군과 장갑차를 바로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여기 계신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  
했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저는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천 수방사 지하에 있  
는 B1벙커에 갇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보도를 듣고 제가 젊은 시절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불빛이 저의 얼굴만 비추고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  
던 그 공포, 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계엄령이 발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의원으로서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몰려들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책무감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그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티비를 통해서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B1병커에서 고문을 받고 있거나 소리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다름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싸웠던 국회의원보다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싸워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접하고, 저는 2019년을 떠올렸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 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가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쿠데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 자신과 권력의 이해를 같이한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일당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내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자신의 권한을 늘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와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윤석열과 맞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탄핵소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 투지로 윤석열을 오늘 반드시 탄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젓값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비로소 시작입니다.

탄핵에 이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범했던 내란범죄등 각종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민생을 파괴한 자,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파괴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살살이 밝혀야 합니다.

탄핵, 처벌, 그 다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구속처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하여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혁을 통해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때만 우리의 이 투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탄핵하고 처벌하고 정권 교체하고 민생과 복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불행히도 저는 그 투쟁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대신하여 조국혁신당의 당원 동지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저를 대신하여 10배, 100배 싸워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이 끝을 보도록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를 대신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 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서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원 동지,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조국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가장 먼저 검찰해체를 주장해왔고 가장 먼저 탄핵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실패한다고 포기해선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해야합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해주십시오.

지치지 않을 것이지요?

여러분을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탄핵소추안 가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현장 메시지**

24. 12. 14.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 국회 본회의장 앞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가슴 졸였을 국민 여러분, 드디어 이뤘습니다. 다행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입니다. 이제 안도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창당을 준비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외쳐왔습니다. 조롱과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괴해 온 기이한 집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탄핵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겐 충갈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강력한 질서’입니다. 이제 질서 있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바로 수사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조본과 헌재를 응원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명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윤석열에 유죄를 선고한다” 라고 언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의 용기와 웃음을 처절한 책임감으로 받들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완성하겠습니다. 국회와 조국혁신당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12일간의 불안은 이곳에 남겨 두시고, 이제 편히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룬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국민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은 곧 척결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반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환장 및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탄핵 사건 지연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시간을 벌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석 3분의 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돕니다. 민주당만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띕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여 국수본 수사를 받는 처지입니다.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 안정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려했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합니다.

어제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국민은 국회에 비상한 각오와 다짐을 주문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주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를 둘러싼 이상 징후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 상설 특검 추천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입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입니다.

국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해외 투자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

습니다.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방이 됐습니다.

다시 약속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2024. 12. 22.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